

데스크 시각



김대성 제2사회부장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새삼 환기되고 있다. 설을 계기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실적이 호조하면서다. 원체 하수상한 시국인지라 그것이 기관 홍보용으로 배포된 자료라도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이 주어지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됐다. 열악한 지방의 재정 강화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 침체 혼란 정국에 빛난 고향 사랑

지난해 시행 2년 차를 맞아 안착 단계에 도달했다는 정부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뒷말이 무성해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발표된 성과만 놓고 보면 안심할 수준이어서 다행이다. 특히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출항민들의 광주·전남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역시 정이 남치는 전라도’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제도 첫 시행 해인 2023년(650억6000만 원)보다 228억7000만 원(35%) 증가한 879억3000만 원을 모금했다. 모금 건수(52만6000 건)도 47.1% 늘

고향기부제 성공 열쇠 ‘지정기부’

어 77만40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광주시가 45억3000만 원으로 2023년(15억2000만 원)보다 30억1000만 원 늘었다. 특히 전남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87억5000만 원을 기부받는 성과를 냈다. 경북(103억9000만 원), 전북(93억2000만 원) 등이 전남도의 뒤를 이었다.
전국 상위 10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광주시 동구가 23억9500만 원으로 모금액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도 1위였던 담양군(23억2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영암군(18억700만 원), 무안군(15억5700만 원), 충남 논산시(14억1800만 원), 경북 영덕군(11억800만 원), 전북 정읍시(10억8600만 원), 경북 예천군(10억5300만 원), 곡성군(10억4600만 원) 등이었다.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들이 모금 상위 10개 지자체 중 5개를 휩쓸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지정기부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 지난해 6월 도입된 지정기부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사실이다.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의 고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지정기부는 기부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기부자의 보람을 극대화하는 장점으로 있다.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서 고향납세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지정기부와 같은 방식을 도입했고, 적지 않은 곳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크라우드펀딩에 나서서 상황이다.

한 예로 지난해 광주시 동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야구단 지원 프로젝트’와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등 지정기부만으로 9억4123만 원을 모았다. 이는 전체 기부모금액 25억원의 37.6%에 달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유치’ 지정기부사업을 진행한 곡성은 목표액 2억5000만 원의 21.6%를 초과한 3억4000만 원을 모금했다. 이 외에도 ‘어르신 돌봄 위한 마

을발래방 프로젝트’와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원 프로젝트’ 등 지정기부사업으로 모금한 기부금이 5억4000만 원을 기록해 전체 기부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의 열쇠는 결국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모금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정기부사업 발굴이 쉽지 않고 지정기부금 사용이 복잡한 데다 내용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는 기부자를 만족하게 할 만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기부 동기를 높이고 만족도 역시 향상시켜야 한다.

세액공제 한도 조정 등 걸림돌 제거를

고향기부제가 ‘2년 차 징크스’를 벗어던진 모양새라고는 하나 향후 경기 침체에도 그 성과가 이어질지는 단정할 수 없다. 세액공제 한도가 변함없고 법인·단체의 참여가 금지된 점 등 제도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지정기부제를 확대해 참여자의 호응감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제도 시행 반년 만에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5개 사업을 발굴했고, 이 중 13개 사업이 모금을 완료했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고향기부제는 정이 많은 우리 민족이 쉽게 호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고향사랑 표현 중의 하나다. 특히 지정기부는 많은 이들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전략이다. 정부는 이제 지정기부 성공 사례가 속속 나타나는 만큼 보다 많은 지자체가 지정기부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세액공제 한도 조정과 법인·단체 참여 허용 등 걸림돌 제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심명섭 국학자료연구원 상임위원

정보화사회 환경 속에서 각종 컴퓨터시스템을 비롯한 인터넷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출판 분야도 기존의 종이자료를 중심으로 벗어나 디지털 자료가 확대 생산되고 있다. 이에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도 더욱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도서관에서 제공해왔던 자료 열람 공간과 자료 대출 반납서비스 만으로는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열람공간과 대출서비스가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단순한 서비스라는 인식과 함께 업무비중에서도 한걸음 뒤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반면에 전자책, 오디오북, 저널, 시청각자료 등 전자 정보자료 비치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도서관협회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이용자

도서관 서비스 환경 변화와 독서혼풍의 지속

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자료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감안하면 시대와 트렌드를 반영한 충실한 장서개발 정책, 정확한 배가를 통한 브라우징 및 검색 편리성을 제공하여 자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대출 시스템 개선으로 절차의 신속성, 대출데스크에서의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통해 이용자와 도서관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에 더욱 더 충실해야 한다.

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서관은 수집한 자료를 소장 보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처리해서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자료를 자유롭게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 이처럼 도서관의 서비스가 자료 이용 위주에 중점을 두게 된 주요 요인은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때를 맞춰 전국의 많은 도서관들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로 현수막 게시, 작가 작품전시회, 작품 낭독회를 개최하고 이를 독서문화가 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도서연체자에 대한 대사면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도 들린다.

즉 도서 연체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일괄적으로 면제해 대출이 정지된 이용자들의 발길을 다시 도서관으로 돌리게 하는 ‘연체도서 특별사면령’ 실시다. 흔흔한 소식임에 틀림없다. 특히 12·3 계엄상태 이후 헌법학과 정치학 등 우리의 민주주의를 알기 위해 학습에 나선

민주시민들이 관련자료 대출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일선 대출담당자의 이야기다.
연체규정은 대출기한이 지난 후에 반납된 도서에 대하여 대출자에게 대출 중지 및 연체료 부과와 같은 적정한 벌칙을 가하는 제도이며 각 도서관마다 상이하지만 목적은 같다. 대출도서가 정확한 반납일에 반납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 사람의 자료이용 목적을 막고 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것이다.

물론 대출한 책을 제때 반납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반납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어 대출을 기피하거나 도서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시행하는 사면령처럼 도서관들이 각각의 기준을 만들어 사면령을 시행한다면, 연체규정으로 인해 잠시 도서관에서 멀어졌던 이용자들도 다시금 발길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분명 이용자들의 문화생활 증진과 지식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독서하는 풍토 없이 국가는 결코 세계의 중심 문화권이 될 수 없으며, 독서문화의 성숙 없이 사회 문화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지키기 위한 관련서적 탐독으로 모처럼 일어난 독서혼풍이 오랫동안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기고

노벨문학상 도시 장흥을 꿈꾸며

내려오고 있다.
호남 5대 명산이자 전국 100대산인 천관산을 비롯해 제암산, 보림사의 가지산, 악불산, 부용산이 정맥을 이루고 있고 그 산에서 발원해 나온 맑은 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수로 꼽히는 탐진강을 이룬다.
또 이수신 장군이 양식을 얻고도 남을 수 있는 바다라는 의미로 명명했다고 전해 오는 ‘득량만(得糧灣)’은 5개 읍·면이 접한 천혜의 수산보고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최대 격전지인 석대들을 위시해 일제강점기 조성된 대덕 도청들, 김형서 선각자가 간직한 산외동들에서 생산된 ‘장흥아르미쌀’은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처럼 천혜의 산과 들,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고장 장흥은 시와 수필 그리고 소설의 많은 소재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장흥은 수많은 문인을 잉태한 고장이다. 고려시대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위씨(魏氏) 3형제를 비롯해 조선시대 송강의 ‘관동별곡’보다 25년이 앞서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관서별곡’을 쓴 기봉 백광홍과 천재 실학자 존재 위백규 선생 등 수많은 문인들이 바로 장흥에서 태어났다.

근현대 들어서는 ‘당신들의 천국’의 이청준을 비롯해 송기숙, 이승우, 이대훈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롯해 전국적으로 130여 명 이상의 유명 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아버지로 이상문학상을 부녀가 수상해 화제가 됐던 한승원 작가는 고향 장흥에서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집필실 일 ‘한승원문학산책길’에는 다수의 시비(詩碑)가 건립돼 있다. 한국문인협회 장흥지부와 장흥별곡문학동인회 등 지역 문인들도 문학도시 명성에 걸맞게 왕성한 문학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08년 문화관광기행 특구로 지정됐다. 천관산 기슭 문학공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명 시조·시인 100여 개 시비가 설치돼 있으며 천관문화관도 자리잡고 있다.

옛날 말에 ‘왕대밭에서 웅대가 난다’고 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강작가에 이어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장흥에서 나오길 희망해 본다.

더불어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있으며 문화와 흥(興)이 넘치는 어머니 고향 같은 정남진 장흥군으로의 문학여행을 추천한다.



박안수 경제학박사·전 농협장흥군지부장

영국은 세계적인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식민지 인도와도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대문호 한 사람의 문화적 가치는 수치로 평가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일례로 여겨진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실제적 뿌리이자 발원지인 장흥군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K-문학 분향’의 사명과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장흥이라는 지명은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 고려 인종이 공예대후 임씨의 은덕을 기리고자 ‘길게 흥하라’는 뜻을 담아 지은 ‘장흥부(長興府)’를 직접 하사한 것으로, 장구한 세월 동안 단 한번의 변경 없이 이어져

社說

민주당 백화제방으로 조기대선 주도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잠룡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후보들이 하나 둘씩 대권 출마 의지를 다지면서 흥행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왔던 김 지사는 그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정치 세력 중 호남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자신이 호남 후보로 대권 경쟁에 나서 민주당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의 대권 출마 선언은 그의 출사표처럼 건전한 정책 경쟁을 통해 민주당의 파이를 키

우는 효과가 클 것이란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인해 당내에서조차 일극체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수 진영의 결집을 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김 지사처럼 좌우편향되지 않고 과감하게 당내 경선에 도전장을 낸 것은 민주당의 파이를 키워본선 경쟁력을 배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백화제방’을 꿈 꿔오면 좋겠다며 많은 후보들의 조기 대선 참여를 반기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비판 속에서 성장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난다는 것은 오랜 정당의 역사에서 경험했다. 민주당의 다양한 후보들이 조기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악화일로 ‘노인 빈곤’ 복지 정책 재검토를

전남이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래 8년 만인 지난해 말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사회가 됐다. 초고령사회는 UN이 정한 기준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국가나 사회를 이른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탓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선거만 되면 노인당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난리를 친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그나마 최근 2년 연속 빈곤율이 악화됐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미미하게나마 개선되던 노인 빈곤율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우리 노인 빈곤율은 2013년(46.3%) 이후 상당 기간 하락 추세를 보여 2020년(38.9%)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다음 해인

2021년에는 37.6%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좋아지는 듯했던 노인빈곤율은 2022년 들어 38.1%로 오르더니 2023년엔 38.2%로 더 악화됐다.

남성 노인 빈곤율이 31.8%인데 비해 여성은 43.2%로 형편이 훨씬 나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빈곤율인 14.9%(2022년 기준)와 비교해보면 노인 빈곤율이 2.5배나 높아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OECD국가 노인들은 노후소득의 60% 이상을 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100만원 미만만을 받는 연금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90%에 달하고, 이중 절반은 40만원 미만의 옹돈 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있다.

노인 빈곤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같은 정부 지원을 취약 노인계층에 집중하는 등 국민연금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

無等鼓

“경북궁 전체면적 19만8624평(坪) 5합(合) 6작(勺)을 총독부에 인도하였다.”

조선왕조실록(순종실록 부록 2권) 1911년(순종 4년) 5월 17일 기사이다. 100여년 전으로 역사의 시계를 돌려보자.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를 겪은 이 땅의 민초들은 일본에 의해 궁궐 건물마저 뜯기거나 매각되는 모습을 지켜봤을 것이다.

대한제국을 강점한 일제는 경북궁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1910 5월과 1914년 7월에 경북궁과 창덕궁 건물 일부를 구매해 통해 일본인들에게 팔렸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경북궁내 일부 건물을 헐고 박람회(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했고, 이어 1926년 궁궐

경북궁 선원전

재단과 함께 ‘경북궁 선원전 편액’을 국내로 환수하고 최근 실물을 인연에 공개했다. 선원은 ‘옥(왕실)의 근원’을 뜻한다.

일본 아동문학가인 구루시마 다케히코(1874-1960) 기념관 김영연 관장(문학박사)은 구루시마가 구연동화 활동을 한 아마구치현을 찾았다가 우연하게 초대 조선총독인 테라우치 마사다케(1852-1919)의 ‘조선관(朝鮮館)’에 대해 알게 됐다. 그리고 이를 단서로 끈질기게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조선관’이 테라우치 고향에 이긴(移建)된 경북

궁의 선원전임을 알게됐고, 마침내 오래된 ‘고메쿠라’ 부가 구매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팔렸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경북궁내 일부 건물을 헐고 박람회(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했고, 이어 1926년 궁궐

에 거주로 걸려있던 선원전 편액과 만나게 됐다. 김 관장은 지난해 10월 펴낸 ‘아니다 거기 있었다’(지식과 감성)에서 자리에 신청사를 건립했다. 1915-1916년께 헐린 경북궁 건물가운데 어진(御眞·임금의 초상화)을 봉안하고 의례를 지내던 ‘선원전’(禱願殿)도 포함돼 있었다.

그동안 아득하게 잊혀졌던 궁궐 문화유산이 100여년 만에 최근 일본에서 돌아왔다. 경북궁내 ‘선원전’에 걸렸던 편액(扁額)이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

/송기동 예방부장 song@

Table with Kwangju Ilbo logo, English name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